
2018 공공기관 혁신계획

2018. 8. 29(수)

공공기관,
국민 **결**심으로

목 차

I.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혁신추진 현황('17년)	1
3. 경영환경 분석	2
II. KAMCO 혁신전략체계	4
III. KAMCO 혁신추진체계	7
IV. 혁신전략별 추진과제	11
1. 공적자산관리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11
과제1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	
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11
②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13
과제2 공적기능 강화 중심의 조직 운영 혁신	
③ 공공성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5
④ 업무효율 제고 및 근로문화 개선	17

2. 사람 중심의 동반성장 실현 18

과제3 대내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

- ⑤ 청년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8
- ⑥ 공공투자와 공익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19

과제4 혁신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 ⑦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수요 창출 22
- ⑧ 보유 역량·공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 23

과제5 동반성장을 통한 공정경제 선도

- 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 24
- ⑩ 사회적 경제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 26

3.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경영시스템 구현 27

과제6 선제적 부패 근절과 인권경영 정착

- ⑪ 채용, 입찰 등 비리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 27
- ⑫ 윤리·인권 및 성희롱 관련 경영체계 강화 28

과제7 국민참여 확대와 시민편익 제고

- ⑬ 국민참여채널 다각화 및 활성화 29
- ⑭ 시설·콘텐츠의 민간 개방 확대 30

I. 개요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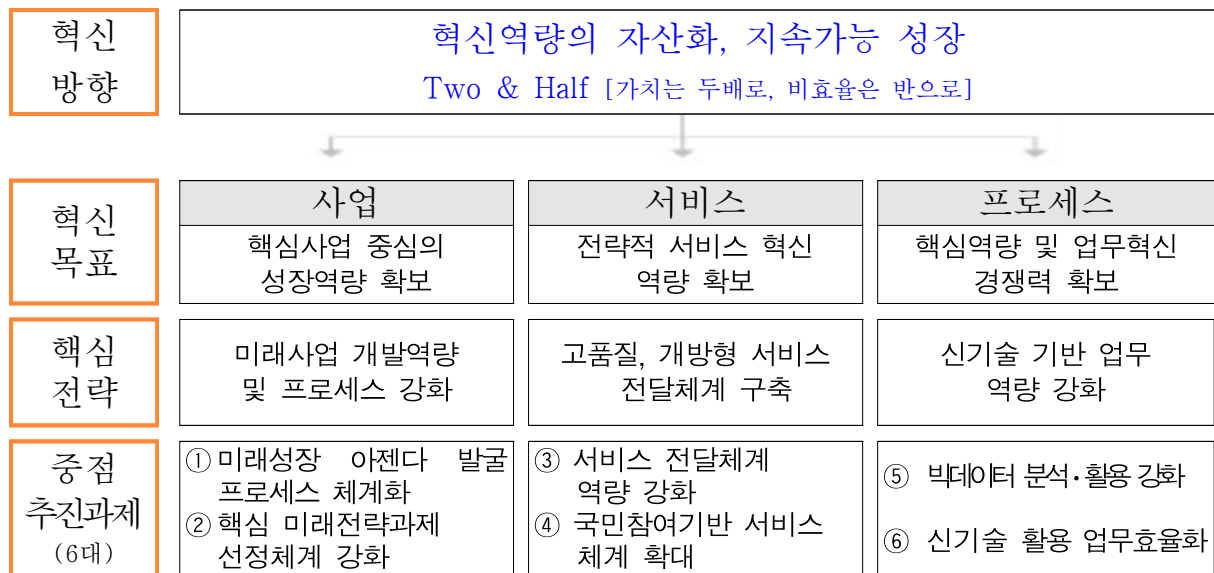
-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자율적 혁신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 그간의 혁신활동 성과 및 최근 경영환경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추진계획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혁신추진 현황('17년)

- **(추진내용)** 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관점 혁신체계(전략·중점과제) 수립 후 전사적으로 각 부문별 우수사례 창출 노력*

* 신사업, 프로세스혁신, 대국민서비스 등 관점 6개 우수과제 발굴 및 BP대회 개최

< 2017년도 경영혁신 추진체계 >



- **(사업)** 공공부실채권 일원화 등 미래과제 선정체계 강화
- **(서비스)** 국민서비스디자인단 운영, 국민제안 시스템 구축 등
- **(프로세스)** 전직원 참여 업무개선 프로젝트 운영, IT 환경 개선 (웹디스크 구축 등) 등 업무효율성 및 일하는 방식 혁신

- **(주요성과)** 공사의 주요 서비스 대상인 가계·기업·공공 부문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통해 공적 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직원이 주도하는 프로세스 혁신 문화 마련 및 국민서비스 디자인단 운영 등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아이디어 발굴 첫 시도
- **(문제점)** 공익성 보다는 성장성, 효율성 등에 치중된 혁신목표, 혁신 소과정에서 국민의 주도적 역할 수행 미흡(경영평가지적사항)
- **(시사점)** 공익 관점 혁신 방향 설정 및 국민참여 강화 필요

3 경영환경 분석

외부환경

- **(정부정책)**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강조 및 3대 혁신 기본방향에 따른 자율적 혁신 추진 유도
 - 정책 수립 및 사업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

< 공공기관 혁신 기본방향 및 과제 >

3대 방향	7대과제
공공성 강화	①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② 대국민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③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④ 혁신성장 뒷받침
	⑤ 공정경제기반 구축
국민신뢰 회복	⑥ 윤리경영 강화
	⑦ 국민의 참여·협력 확대

- **(국민 시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 활동 및 역할 기대

내부환경

- **(사업방향)** 금융취약계층 지원, 기업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가치 증대 등 공적 서비스 지속 확대

<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향후전망
가계	·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확대	공공성 강화 역할 확대
기업	·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 확대	
공공	· 국·공유재산 개발 확대 및 다각화 추진	

- **(내부의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영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관련 과제 발굴·성과 도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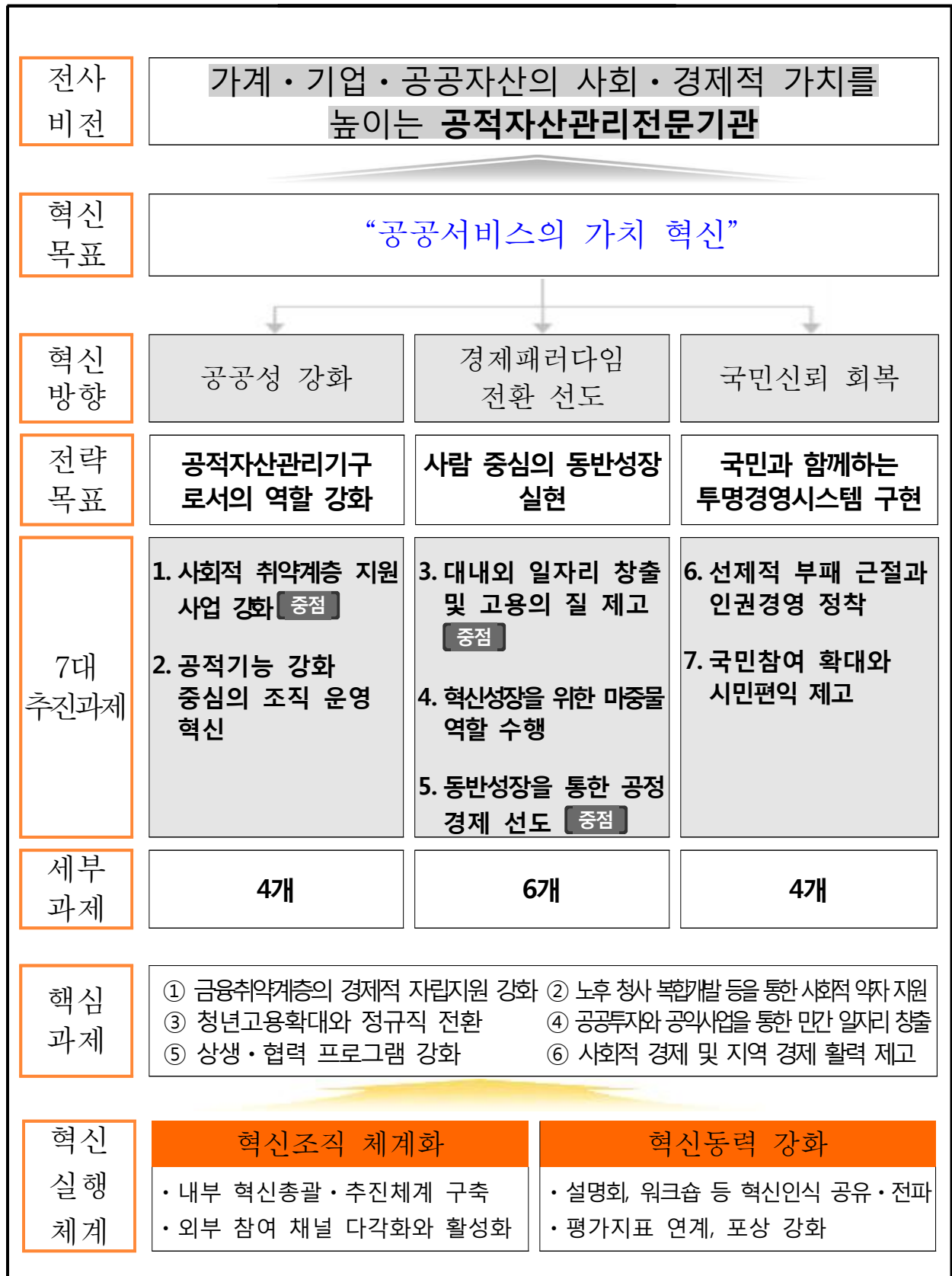
- 캠프 목적사업 자체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고 구체화한 혁신과제 발굴·이행 필요*

* 경영혁신위원회, 경영혁신챔피언단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 등 반영

시 사 점

- 캠프 혁신의 키워드는 ① 핵심사업의 공공성 강화, ②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발굴, ③ 국민 참여 혁신
- ⇒ 상기 3가지 키워드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과는 다른 공익적 관점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 마련 필요

II. KAMCO 혁신전략체계



< 혁신전략 및 과제총괄표 >

전략목표	전략 과제	세부 추진과제
공적자산관리기구 로서의 역할강화	1.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강화 중점	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핵심과제 ②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핵심과제
	2. 공적기능 강화 중심의 조직 운영 혁신	③ 공공성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구축 ④ 업무효율 제고 및 근로문화 개선
	3. 대내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 중점	⑤ 청년 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핵심과제 ⑥ 공공투자와 공익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
	4. 혁신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⑦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수요 창출 ⑧ 보유 역량·공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람중심의 동반성장 실현	5. 동반성장을 통한 공정 경제 선도 중점	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 핵심과제 ⑩ 사회적 경제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 핵심과제
	6. 선제적 부패 근절과 인권경영 정착	⑪ 채용·입찰 등 비리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 ⑫ 윤리·인권·성희롱 관련 경영체계 강화
7. 국민참여 확대와 시민편익 제고		⑬ 국민참여채널 다각화 및 활성화 ⑭ 시설·콘텐츠의 민간개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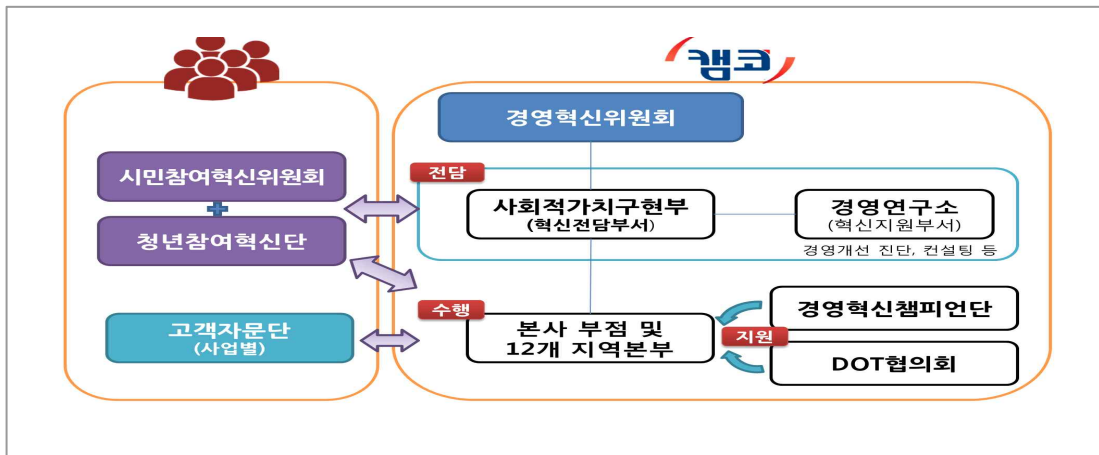
중장기 추진목표

추진 과제	'18년 추진목표	'19~'20년 (고도화)	'21~'22년 (정착기)
전략목표#1 공적 자산관리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1.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강화			
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연체자 지원 20만명	5만명 지원	25만명 지원
②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공익성을 고려한 복합개발 추진	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공익목적 개발 확대	
2. 공적기능 강화 중심의 조직운영 혁신			
③ 공공성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구축	공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공공성 기반 캠프법 개정 및 공공성 사업 정착·안정화	
④ 업무효율 제고 및 근로문화 개선	VDI, To-do리스트 추진	스마트워크환경 고도화 업무환경 혁신 근무유연성 강화	
전략목표#2 사람 중심의 동반성장 실현			
3. 대내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			
⑤ 청년 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20명 이상 채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22년까지 300여명 채용 근로조건의 질적 지속 개선	
⑥ 공공투자와 공익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 매년 1만 여명 수준의 일자리 고용 효과 창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신규사업 추진		
4. 혁신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⑦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수요 창출	드론활용 국유총조사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드론 활용 상사관리체계 고도화 민간 사업 및 육성사례 확대	
⑧ 보유 역량·공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	공무원 직무교육 특화 온비드공매정보 개방 강화	행정전문교육기관 입지 구축 보유데이터 민간 지속 개방	
5. 동반성장을 통한 공정경제 선도			
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	하도급 자금이 운영 지역IT스타트업 지원	협력사·지역사회 상생채널 운영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	
⑩ 사회적 경제·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공공기관 협력모델 구축	필요 공간지원 등 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략목표#3 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경영시스템 구현			
6. 선제적 부패 근절과 인권경영 정착			
⑪ 채용·입찰 등 비리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	채용 계약 모니터링 강화 제도 정비 등 부패요소 차단	부패Zero화, 감사우수, 청렴 평가 우수등급 획득 지속	
⑫ 윤리·인권·성희롱 관련 경영체계 강화	인권영향평가 도입 성희롱 등 엄격 처벌	공공기관 최고수준의 윤리 인권경영 체계 운영	
7. 국민 참여채널 강화와 시민편익 제고			
⑬ 국민참여채널 다각화 및 활성화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국민제안 공모 활성화	사업계획, 점검에 국민참여 프로세스 구축	
⑭ 콘텐츠와 결합한 보유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주차장, 강당, 사옥일부 대외 개방	열린강좌 공매투자카데미 확대 사회적 필요시설 지속 공급	

III. KAMCO 혁신추진체계

- ▶ **(내부)** 경영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전담부서가 캠프 혁신을 총괄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실무 및 지원 조직 운영
- ▶ **(외부)**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청년참여혁신단 등 국민의견 반영

< 캠프 혁신조직체계 >



1 내부 조직체계

- **(경영혁신위원회)** 자율적 경영혁신을 위한 혁신전략 수립, 혁신 과제 발굴,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
 - 부사장, 상임이사, 선임부점장 등 13명 이내로 구성
- **(혁신전담조직)** 전사 혁신 전담 조직은 사회적가치구현부가, 경영 개선진단·컨설팅 등의 지원업무는 경영연구소가 수행
- **(실무·지원조직)** 내부혁신역량 강화, 혁신과제 지속적 점검 및 과제 수행조직으로 경영혁신챔피언단 및 DOT협의회 운영
 - **(경영혁신챔피언단)** 경영평가 각 지표 전담자로서, 혁신 실효성 확보와 실무적 관점의 성과점검 및 피드백 수행
 - **(DOT협의회)** 현장직원의 혁신 협의체인 DOT협의회(Dream our tomorrow의 약자, 17년까지 4기 운영)를 '주니어 보드' 로 운영 추진

2 외부(국민) 참여

□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 : 윤은기 동아대 교수)

- 전문가, 시민단체, 고객·지역주민 등 총 15명의 외부위원을 선정하고 혁신계획 및 혁신활동에 대한 의견 반영 추진
- 7.24일 1차 토론회 개최, 향후 분기별 정기모임 및 수시회의 진행

<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구성 >

구 분		참여자
외부	전문가	·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및 학계 종사자 3명
	시민사회단체	· 환경운동연합 대표 및 부산YWCA 사무총장
	고객·지역주민	· 캠프코 지원 기업 실무담당자, 부산 지역 공매 전문가, 채권 관련 금융회사 담당자, 국유재산 피해부자 등
	협력업체	· 국유개발 관련 협력사 직원 · 일자리 창출 관련 부산사회적기업연구원 직원
내부	부서장	· 사업본부별 부서장 1명씩 4명 참여

□ 청년참여혁신단 구성·운영 (단장 : 박수민 전북대 학생)

-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19세 이상 청년층 18명의 혁신단을 구성,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등에 특화된 의견 수렴·반영
- 7.23일 1차 회의 개최, 분기별 정기 모임·온라인 의견수렴 추진

□ 사업별 고객자문단 등 운영

- 국민 관점의 불편사항 및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가계·기업·공공·국유 등 사업별 고객자문단 등 구성·운영
- 사업별 특성 및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라 점진적 설치·운영

□ 공공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운영

- 부산혁신도시 내 국제금융센터(BIFC) 공공기관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기관 협업방안 모색 및 공동과제 발굴 추진

□ 혁신계획 수립

- (내부의견 수렴) 혁신계획 수립 설명회, 사회적 가치 공유 워크숍, 경영혁신위원회 등 임직원 논의를 거쳐 혁신과제 발굴 및 계획수립
 - 101개 혁신과제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그 중 14개 중점과제 선정
- (외부의견 수렴)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청년참여혁신단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계획(안) 마련

<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주요 의견 >

제안 내용	혁신계획 반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지원 사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창출 계획에 반영 신규 - 미혼모 및 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직업진로 코칭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 신규 - 부산 이전 공공기관 및 부산시와 공동으로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파트에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등 노력 및 과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에 반영 신규 - 지역공공기관과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협업과제 마련 등의 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강당 등 공간만 개방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에 반영 개선 - 캠프연수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온비드공매 투자설명회, 박람회 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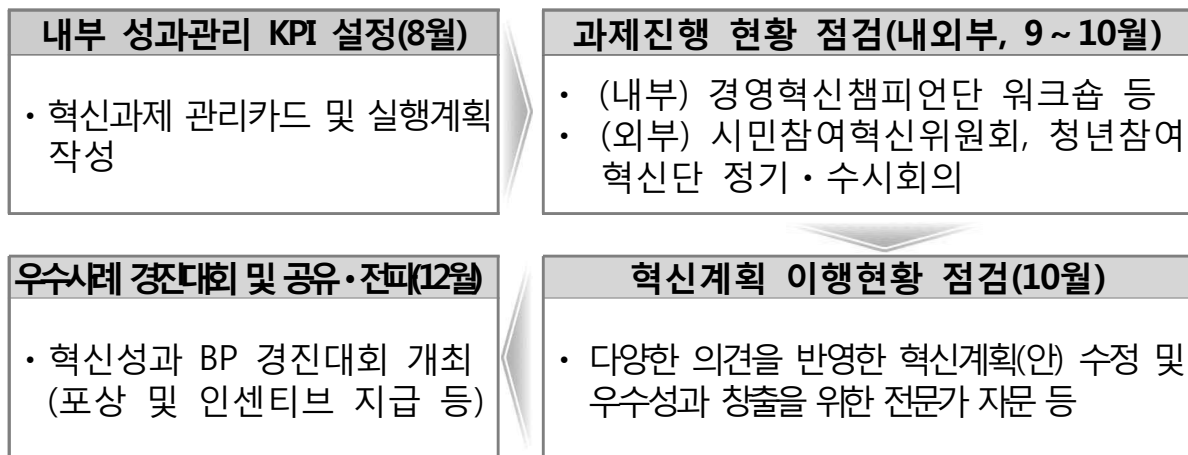
< 청년참여혁신단 주요 의견 >

제안 내용	계획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정책이 창업에 초점 폐업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업무영역확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지원 사업 여부 연구 추진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휴경작지 활용 청년창업 확대시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 및 협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휴재산 활용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에 반영(협업기관 확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토론방을 개설하여 국민의견 수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토론방 개설 및 운영에 반영 개선

□ 이행 및 점검

- 세부실행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부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관리 진행
 - 과제별 KPI를 설정하고, 이를 전사 KPI 관리체계 포함하여 전사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혁신 이행동력 확보
 - 혁신과제 관리 절차, 평가지침 등을 명문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 혁신추진조직(DOT협의회, 혁신연구회 등) 및 국민참여조직의 회의·워크숍, 내외부 자문 등을 통해 각 과제 이행점검 및 개선
- 연말 BP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포상 및 전파·공유
 - 부점별 평가 차등폭을 확대하고, 개인·부서별 혁신BP 포상금 지급 확대 등 성과평가·포상 강화

< 혁신계획 이행 점검 프로세스 >



IV. 혁신전략별 추진과제

전략목표 #1 공적자산관리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추진과제 1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 중점과제

- ◆ 금융취약계층 채무탕감 및 자립 지원('18년 20만명에서 지속 확대)
- ◆ 창업실패자 재기 프로그램 및 한계중소기업 지원플랫폼 구축
-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공유 부동산 개발방식 도입 등

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 회수불능채권 소각을 통한 금융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전 해소

- (개요) 채무조정 등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취약계층의 채무탕감 등을 통해 생계형 채무자의 빚의 굴레 탈피 지원
 -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추심중단 및 보증채무 면제를 통한 채권 소각으로 경제적 재도약 기반 조성
 - *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약 83만명, 3.6조원으로 추정
- (추진방안) '18년 20만명 지원을 목표로, 재산·소득 조회 및 연대보증 재산 조사를 통한 상환능력 일괄 조회 추진
 - 면밀한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매년 2회 채권소각을 통해 '21년까지 총 50만명 규모 지원
 - 캠프 관리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외에도 외부 금융회사의 장기소액연체자 채권도 매입하여 소각하는 등 수혜자 확대 추진
 - 채권매입 재원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채권매입·소각 추진
 - 교정시설 재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채권시효 연장소송 금지 등 수혜 사각지대 해소

□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신설

- (개요) 창업실패에 따른 과도한 보증채무 부담 등에서 벗어나 Restart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업자 재기 프로그램 신설
- 은행, 금융공공기관 등 분산된 창업실패자의 채무를 캠프로 이관·집중 후 재기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① 채무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허용, ② 신용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등 삭제, ③ 채무 완제 또는 성실상환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창업지원금 허용 등
- (추진방안) 정부·금융공공기관·은행 등과 협력을 통해 창업 실패자의 채무를 개별 또는 일괄 매입
-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18.3분기)
- 접수센터 및 시스템 마련, 창업실패자 지원신청 접수 착수('18.4분기)
- 금융공공기관 채권 일괄 매입 및 기타 법령 개정 추진('19년)

□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구축 등 한계중소기업 재기지원 다각화

- (개요) 기업과 투자자를 매칭하고 공적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추진방안) 온라인 홈페이지 '온기업'을 구축하여 재기 지원 내용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에 적합한 맞춤 상담 제공
- 전국에 27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혜 기업 범위 점진 확대
- 중개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의 매칭을 지원하고, 캠프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과 DIP금융 등도 연계

② 노후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 국·공유 유휴부동산 개발을 통해 사회적 필요시설 공급 확대

- (개요) 캠프 관리 국공유지 개발, 위탁에 따른 노후청사 개발 등 국·공유 유휴부동산 개발 사업의 공익성 강화
- (추진내용) 총 41건의 사업 진행 및 승인 추진으로 향후 '21년까지 약 2.4조원 규모의 국·공유 개발 사업* 투자

* 단, 추진사업 중 송파CT보안클러스터(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사업기간은 '25년

< 국공유개발 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억원)

국유재산				공유재산		계	
위탁개발		기금개발		위탁개발			
18건	17,807	6건	2,375	17건	3,678	41건	23,860

- 개발사업을 통해 높은 고용유발 및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민생시설 등 사회필요시설 공급*에 기여

* 다문화·여성 회관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구리시), 도심지 주차장 공급(창원시) 등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 (개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국정과제 47번)」을 위해 신규 복합개발 방식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지원
- (추진방안) 노후청사 개발 후 잔여 용적률을 활용하여,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모델을 도입



- 임대주택 개발이 가능한 청사를 전수조사하고 사업성 분석을 통해 선도사업지 7건*을 지정하여 1,300호 규모 공급 추진

* 선도사업 중 3건은 '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4건은 사업승인 추진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소재지	총사업비(억원)
승인 완료	영등포선관위	서울 영등포구	150
	남양주비축토지	경기 남양주시	215
	광주동구선관위	광주 동구	74
승인 추진	舊부산남부경찰서	부산 남구	1,295
	舊원주지방국토청	강원도 원주시	576
	舊충남지방경찰청	대전 중구	1,140
	舊천안지원 지청	충남 천안시	274
계			3,724

- 완공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대상(일부는 고령자 등에 배정), 시세 대비 70~80% 수준에 장기 거주(최대 6년)가 가능하도록 공급할 계획

□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유재산 매칭 추진 시민의견 반영

- (개요) 소상공인, 청년창업농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유휴토지 발굴 및 매칭
- (토지 개발)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재산의 토지개발* 추진

*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건축뿐만 아니라 많은 필지에 대해 절토,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토지 개발 가능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부지 조성

- (토지 매칭) 소상공, 청년창업농, 창업보육센터 등에 적합한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 지원

* 대상자는 지자체, 소상공인진흥공단, 귀농귀촌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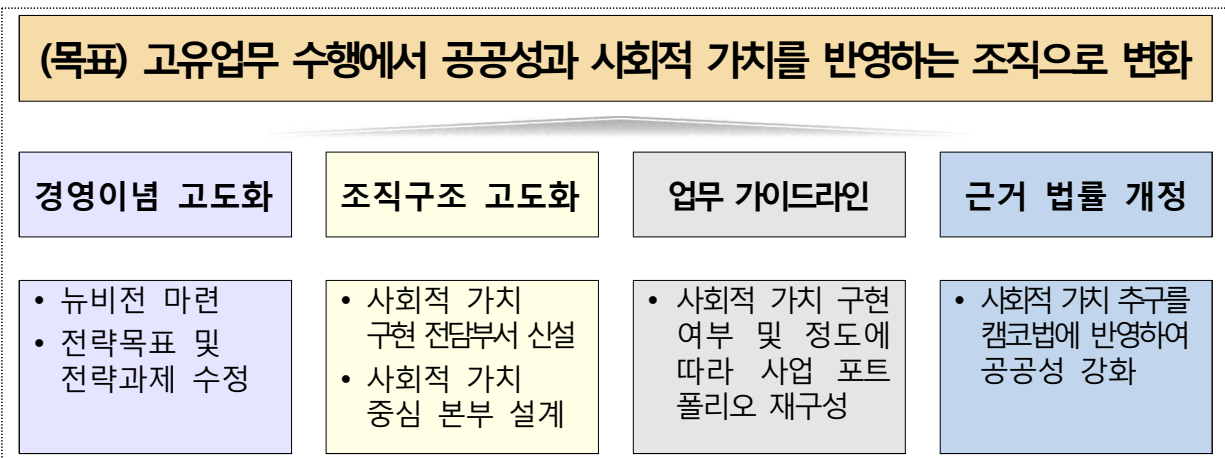
- ◆ 사회적 가치 반영 경영 인프라 재설계, 업무추진 가이드라인 제정
- ◆ ICT 고도화,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

③ 공공성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위한 경영인프라 재설계

- (개요) 정부의 정책 비전을 구현하고, 캠프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사회적 가치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인프라 개선
 - 경영목표·조직구조, 업무가이드라인, 사업근거 법률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재구축

< 경영인프라 재설계 프로세스 >



- (경영이념·조직구조 개편) 금융시장 안정(금융회사, 채권자) 중심에서 사람(채무자, 채무기업, 공익) 중심의 경영이념 전환을 위해,
 - “가계·기업·공공 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 관리기관”으로 비전을 재설정하고, 전략목표 및 과제 재설정
 - 사회적가치구현부, 일자리창출실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가계·기업·공공)별로 사업본부 재편

- (업무추진 가이드라인 운영)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 재검토
 - 2가지 가이드라인(기본, 보완)으로 구분 운용,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검토 후, 기존사업 유지·정리, 신규사업 추진 등 결정
 - ‘사회적 가치 구현’ 미충족시 보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사업구조 수정

◇ 기본 가이드라인

- ① **캠코법상 사업근거** : 캠코법 제26조 등 사업근거 존재 여부
- ② **캠코 존립목적** :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 제고 해당 여부
- ③ **공공성** : 특정 개인이나 법인(캠코 포함)만을 위한 사업을 배제
- ④ **사회적 가치 구현** : 일자리 창출, 상생(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협력(민간영역 침범, 타 기관 중복 배제), 지역발전

◇ 보완 가이드라인

- ①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예시 참조)
- ② **수익성** : 사회·경제적 가치제고 사업의 지속수행을 위해 일정 수익 담보

< 가이드라인 적용 예 >

사업명	기본가이드라인 검토	보완가이드라인 재검토
부실채권 간접투자	i) 캠코법 제26조제1항제13호에 해당 ii) 존립목적 : 채권 재매각에 따른 과도한 추심 방지로 가계·기업 재기지원 해당 iii) 공공성 : 특정 개인이나 기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공공성 해당 iv) 사회적 가치 구현 : 일자리 창출 등 다른 가치는 충족하나, 민간투자자와 영역이 중복되어 재검토 필요	(사회적 가치) 민간과 협업에 한정 투자규모 최대투자자 미만 전체 부실채권시장의 15% 이내 투자 등 민간영역 침해 최소화 및 협업 방식 활용 → 업무 수행

- (근거법률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는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캠코법상 설립 목적을 재설정하고 업무범위 명확화 추진('19년)

< 캠코법상 설립목적 개선(예시) >

캠코법	현행	개선
§26① 1~2호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부실자산 정리, 통합 및 관리를 통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26① 3~4호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가계·기업의 재기 지원
§26① 7~9호	국공유재산·조세채납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④ 업무 효율 제고 및 근로문화 개선

□ ICT 고도화를 통한 업무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

- (개요) 차세대 ICT기술 활용, 영상회의 및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추진
- (IT 인프라 지속개선) AI를 활용한 챗봇시스템(챗봇) 기능을 확장하여 업무집중 향상을 위한 할일(ToDo) 관리시스템 구축(18년)
 - * (주요기능) 할일 등록, 업무 우선순위 관리, 일정 변경, 공유 등
-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데스크탑 가상화(VDI) 시스템 도입을 통해 출장·이동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18년)
- (영상회의 활성화) 본사와 11개 지역본부 등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출장을 줄여 업무집중도 및 효율성 제고
 - 27개 지역본부·지부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의 원격 상담 지원
- (스마트 통계시스템) 국유재산 데이터 가공 자동화 및 실시간 공유기능을 갖춘 통계분석 포털 구축으로 통계 업무효율 증대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시간 근로문화 해소

- (개요) 주 40시간 근로시간 엄수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 및 자발적 근무혁신 문화 조성
- (추진방안) 인사·조직·전산부서 관리자 및 노동조합 참여 근로문화·제도 개선지원 TF팀을 통해 업무몰입도 제고방안 마련
 - 근무시간 엄수를 위해 부점별 초과근무가능 총량을 정하고 초과 시 관리자 평가에 반영하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
 - 집중휴가(5일 이상) 사용률 측정 등 직원 휴식권 확보 노력을 평가와 연계하고 집중근무시간 운영, 집합교육·회의 최소화

전략목표 #2 사람 중심의 동반성장 실현

추진과제 3 대내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제고 중점과제

- ◆ '22년까지 300여명 고용 확대, '18년 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
- ◆ 공공투자 및 공익사업 수행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⑤ 청년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직접 고용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개요) 청년실업 및 소득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 범위에서 직접 고용을 최대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
- (추진방안) 상·하반기 신입직원 2회, 경력직 등으로 '18년중 120명 이상 채용 추진('22년까지 300여명 직접 채용)
 - 육아휴직 인원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대체 채용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시간선택제 확대 운영 추진
 - 5년 이상 근속한 업무지원직 직원에게 일반관리직 전환 절차를 통해 기회의 사다리 제공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를 통한 고용안정 도모

- (개요) '17년부터 시행한 파견근로자 전환을 완료하고,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여건 및 환경 조성
- (추진방안) 전환 대상 파견근로자 198명('17년 106명, '18년 92명)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
 - 용역근로자 전환대상을 확정하고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완료 추진('18년)

⑥ 공공 투자와 공익 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고용효과 확대

- (개요) 기업자산 인수 · 국공유개발 · 가계재기 지원 등 사업별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연간 1만명(17년 실적 기준) 이상 고용효과 지속 창출

< 주요 사업별 '17년 민간일자리 창출 실적 >

(단위 : 명)

구 분	주요 내용	일자리 창출 실적		
		'16	'17	증감
가계 재기 지원	· 행복잡이 사업 강화, CA사· 변호사 증가 등	2,263	3,824	1,561 ↑
기업 정상화 지원	· 선박 인수 확대(23척, 전년 12 ↑) · Sale&leaseback 확대(1120억원, 전년 461 ↑)	1,164	1,735	571 ↑
공공 가치	· 국·공유지 위탁개발 확대 추진	1,719	3,094	1,375 ↑
경영 지원	· 콜센터, 스캔센터, IT, 사옥 시설관리 등	527	552	25 ↑
합 계		5,673	9,205	3,532 ↑

- (기업자산 인수) 중소기업 자산 및 선박 인수(4,000억원)을 투자 하여 기업의 도산 방지 및 고용안전망 역할 수행
- (국·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고용유발효과가 큰 국·공유 부동산 개발사업(41건)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 국유행정재산 전수조사(총 193만 필지 대상)시 현장조사자(950명), 검수자(20명) 등 지역별 거주자를 약 1,000명 규모 채용
- (가계재기지원) 행복잡(job)이 등 금융취약계층 취업 지원과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신용정보사 등 협력사 고용 창출 계속
 - 채용박람회 연계, 고용보조금 제도 홍보 강화, 고령 구직자 공공 근로 연계 등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취업지원 강화
 - 금융공공기관 상각채권 인수 정례화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인수기관 확장 등 관리 채권 지속 확대로 협력사 고용기반 유지

□ 제도권 지원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 취업 지원 시민의견 반영

- (개요) 미혼모 및 보호시설 퇴소청년 등 제도권 지원이 취약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 추진(18년 하반기)
- (추진방안) 자립의지가 높은 보호시설* 대상자를 선발, 취업 컨설팅 기관과 협업, 취업상담 및 직업진로 코칭 등 진행
 - * 미혼모 시설 및 부산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등의 18세 이상 거주자
 - 희망직무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자격증 취득*을 지원, 부산후원기업과 1:1 멘토·멘티 매칭 추진
 - * 속기사,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중장비, 미용, 제과제빵 등
 - 교육 이후 캠프 행복잡이 등과 연계하여 자립기회 제공



□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동참

- (개요) 대학생 취업역량 증대 및 지역인재 취업 확대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계속
- (추진방안)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그램, 부산지역 대학생 정보교류 네트워크(BUFF) 및 체험형 인턴십 확대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기업(채용) 설명회, 공동 채용 박람회 또는 현장 채용, 부산지역 출신선배와의 대화 등 취업 지원
 - '22년까지 신규 채용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립·운영 시민의견 반영

- (추진배경)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추진

* 캠프코·한마음·희망모아·국민행복기금 등 약 209만명 채권 보유

- (센터 설치) 정부·지자체·장학재단(청년채무자)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청년 창업 지원센터 공동 설치

- (재원조성) 공사 한마음금융 등 배드뱅크 잔여 재원 및 장학재단·지자체 등과 공동기금 조성

- (운영구조) 공사(사무공간 제공, 센터운영), 사회연대은행(창업 컨설팅), 창업선도대학(창업 아카데미) 등 기관별 협업 구조

- (지원 프로그램) 창업전·창업시·창업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인재행정지원·정보관리·경비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인재행정지원) 창업 아카데미, 회사설립 행정(법률·세무) 지원,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 (정보관리) 시장조사·분석, 지원제도 매칭(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안내), 경영컨설팅

- (경영지원) 창업자금 지원, 사무공간·집기 제공, 경영활동 지원

- ◆ 드론 활용 국유재산 조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 ◆ 보유역량 및 인프라 공유를 통한 교육, 창업 지원 등

⑦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수요 창출

□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총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 (개요) 차세대 무인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전국 국유재산 조사를 통해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캠퍼의 자산관리 역량 증대
- (추진방안) 국내 첫 대규모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총 193만 필지 중 56만 필지(약 30%)를 드론 활용* 조사 실시('18년)
 - * 국유재산 총조사를 위한 측량용 드론 35대 도입 완료를 통해 약 14억원의 드론시장 공공수요 창출(17.12월)
- 드론 영상 후처리시스템 도입 및 국유재산 총조사 완료 후 드론을 활용한 행정재산 상시관리체계* 구축 추진
 - * 국유일반재산 조사의 드론활용 확대('19~21년), 드론영상활용 국유재산 자동모니터링 체계 구축('22년)

□ 국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 (개요) 유휴 국유지 활용 공공·민간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 (추진방안) ① 남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상 사업지를 발굴하여 발전회사에 대부(임대)
 - 최적 발전회사를 선정 후 기재부 특례심사(장기대부 등) 승인 요청 및 발전사업 인허가 협조, 시설물 축조 조건 완화 지원
 - 소규모 토지 활용 및 옥외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민간 에너지사업자 확대를 위해 대부기준 개선 추진 등 제도 개선 병행

⑧ 보유 역량·공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

□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등 캠프코 노하우 공유·확산

- (개요) 국공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 체납압류재산처분, 온비드 등 캠프코 특화 교육 과정 확대로 공무원 등 직무역량 강화
- (추진방안) 연간 50회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연간 2,000명 이상의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생 배출
 - 공용재산취득사업, 국가채권·국공유재산 관리 워크숍, 온비드 이용기관 교육을 통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실무역량 제고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도폐지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평생 교육시설 인가 추진을 통한 자산관리전문기관 입지 강화

□ 유휴공간을 창업초기기업·벤처기업 등과 공유

- (개요) 캠프코 보유 건물 내 유휴공간을 민간 또는 창업지원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청년 스타트업 자립기반 조성

< 캠프코 지역본부 사옥 내 창업지원 공간 공유계획 >

구분	내용
광주전남본부	사옥 내 별관을 일자리센터 잡카페 '청춘발산 공작소'로 개소('18년)
전북지역본부	유휴 면적을 활용하여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간조성('18년)
인천지역본부	신규 사옥 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추진('19년)

□ 온비드 공매 정보 민간 활용 활성화

- (개요) 민간수요가 높은 온비드 공매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
- (추진방안) 이용기관 온비드 교육시 Open API 이용 안내, 우수 활용사례(중소기업진흥공단) 소개 등 활용 적극 권유
 - 위비홈즈 등 유관기관의 부동산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고 앱개발센터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Open API 접근성 향상 추진

◆ 지역밀착형 상생프로그램 추진, 하도급 지킴이 활용 불공정행위 방지

◆ 부산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혁신도시BP 창출)

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시민의견 반영

- (개요) 차별화된 지역밀착형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력을 추구
- (추진방안)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 특산품 구매, 청소년을 위한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센터 등에 작은 도서관(캠코브러리) 설치('18년 4개 지역)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국유재산 피대부자 생산 작물 등 지역특산품 구매, 1사1촌·부산서점협동조합을 통한 도서구매 등 지역교류행사 지속 추진
 - 지역 청소년에 대한 미래 투자 및 교육을 위해 부산권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선도적 활용

- (개요) 계약 및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도급 지킴이를 국·공유개발사업에 전면 적용
- (추진방안) 광주 통합청사 개발사업에 시범 적용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창원시 복합공영주차 타워 등 신규 착공현장으로 확대
 - 향후 시설공사 발주시 '하도급지킴이' 명문화 및 계약 시 이용 확약,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지급확인제 시행

□ 지역 IT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개요) 지역 IT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 추진
- (추진방안) 캠퍼 내부의 업무상담시스템(AI기반 챗봇) 및 통합 검색시스템(빅데이터) 등 개선 목표로 공동 협업
 - 부산 창업보육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예비·초기창업자 선정 및 공동 협업 업체·과제(빅데이터 등) 선정하고 시스템 공동 구축
 - '18년 중 협업대상자 및 R&D 과제 확정 후 매년 지속적 확대

< 단계별 추진 전략 >

1단계(도입기 : 18년)	2단계(성숙기 : 19년)	3단계(안정기 :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체 현황조사 · 신규과제 발굴 · R&D 과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협업모델 수립 · 신규과제 발굴 · R&D 과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수행과제 발굴 · R&D 과제 수행

□ 국세물납법인 주식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방식 도입

- (개요) 국세 물납 주식의 위탁관리자로서, 단순 처분·배당금 수령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책임투자*' 방식 도입
 - *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Social), 지배구조적(Governance)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경영 관여 및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투자방식
- (추진방안) 책임투자 이행조직(전담팀, 수탁자책임위원회) 설치, ESG 평가체계 수립, 주주제안권, 의결권 행사 등 기업 관여활동 추진
 - 시범적으로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물납기업 중 약정 체결기업에 대해 사회적 가치 1~2가지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 추진 로드맵 >

1단계('18년)	2단계('19년)	2단계('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투자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 훈령) · 시범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50% 이상 경영관리 약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책임위원회 설치, 전담팀 운영 · 대상기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25% 이상 경영관리 약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모형 체계 확립 · 기업지배구조 가이드 라인 제정 · 대상기업 지속 확대

⑩ 사회적 경제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부산 공공기관 공동기금 운영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 (개요) 부산 사회적 경제지원기금* 및 고유 사업을 활용하여 금융(경영자금) 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추진

* 지역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5년간 50억원을 목표로 부산 8개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으로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이 위탁 운영

- (추진방안) 창업단계(Start-up) 및 성장단계(Scale-up) 사회적 기업 총 15개사를 선발하여 경영자금 지원(5억원)

- 창업 아카데미(지역 대학 연계) 운영으로 예비 창업가를 육성하여 '19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국비)에 연계 지원
- 각 기관이 보유한 법률, 세무, 재무, 회계 및 마케팅 전문가를 조직화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에 경영 컨설팅 제공
- 사회적 경제기업이 국유재산 이용 또는 매수 시 대부료 감경(5→2.5%) 및 수익계약에 의한 매각 확대 추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 상생·협력체계 구축 시민의견 반영

- (개요) 부산 이전 공공기관 및 부산 지방공기업*, 부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캠코,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추진방안) 기존 고유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동협업과제 발굴 및 실행

- 부산 지역 공공기관·부산광역시와 협의체 구성, 범업 조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관련 공동 컨퍼런스·박람회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 협업과제를 발굴·시행하는 한편, 우수사례(BP) 창출을 통해 전국 확산 추진

전략목표 #3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경영시스템 구현

추진과제 6 선제적 부패 근절과 인권경영 정착

- ◆ 채용, 입찰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선제적 부패요소 차단
- ◆ 정량적 윤리수준 진단 점검 체계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

⑪ 채용, 입찰 등 비리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

□ 채용 등 국민관심사항에 대한 감사 모니터링 강화

- (개요) 채용 등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절차에 감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부 고객 대상 신고절차 안내·교육 강화
- (채용 수과정 감사인 입회) 채용 프로세스별 취약 체크리스트 작성, 감사인 입회·점검 및 채용문서 영구보존 의무화 추진
- (외부 고객대상 교육) 캠프의 온비드 투자 설명회, 청렴가두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부정부패 사례 신고 안내
 - 계약체결업체 대상 「신고 안내문」을 필수 첨부

□ 개발사업의 사전적 부패유발요인 차단

- (개요) 계약의 공정성 및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설사업의 계약사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모니터링 강화
- (추진방안) 설계공모 및 관급자재 등 심의업무를 사업업무에서 분리하여 개발 용역업체 및 관급자재 선정 등 계약 투명성 제고
 - 청렴계약제, 건축안전분야 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거래업체 대상 계약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 윤리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갑질근절 자가진단 제도 도입, 갑질피해 상담 및 제보시스템 구축 등

⑫ 윤리·인권·성희롱 관련 경영체계 강화

□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자체 진단 및 점검체계 도입

- (윤리수준 진단·환류) 윤리경영 실천수준의 객관적 점검을 위한 윤리수준 시범 진단* '18년 실시

* 추진과제별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정량화 가능한 과제대상 점검

- (윤리경영 실행력 확보) 내부 성과평가(비계량 평가착안사항, 교육 참여도 평가) 연계를 통해 성과관리 및 이행력 강화

□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관련 제도 도입 및 정비

-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 인식 개선을 위한 전직원 교육(인권 콘서트), 관리자급 대상 정기적 교육(인권수준 진단 후속 교육) 실시

* E-letter 발송, 윤리/청렴 Quiz, 윤리경영 가이드북 등 제작

- (인권침해신고채널 운영) 즉각적인 인권침해 사실 신고채널인 K-인권센터(인권침해 및 성희롱 신고채널) 구축 및 운영

- (인권지킴이 운영) 즉각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각 부점별로 '인권지킴이'를 선정·운영

- (인권영향평가 도입) 기관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예방적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체계 구축

□ 성희롱·성폭력 지도점검 강화와 엄격한 재발방지 조치 시행

- (지도점검) 고충처리위원 및 노동조합 협업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성희롱 등 사례조사 및 예방적 지도 감독 업무 수시 수행

- (무관용 원칙 확립)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도입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

- ◆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고객의견 직접수렴 등 국민참여 활성화
- ◆ 캠프 도서관, 강당, 연수원 등 지역사회 필요시설 개방 추진

⑬ 국민참여채널 다각화 및 활성화

□ 쌍방향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시민의견 반영**

- (개요) 주요 사업계획 및 신규 사업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상 채널 구축
- (추진방안) 행정안전부의 ‘국민생각함’을 벤치마킹하여 홈페이지에 가칭 ‘국민토론폰방’을 개설하고, 사업이슈별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 * '18.8월 중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여 하반기 개발 완료
 - 국민 관점의 불편 및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가계, 기업, 공공, 국유 등 사업별 고객자문단 등 구성

□ 기존 채널을 활용한 국민의견 수렴 활성화

- (개요) 국민제안·대국민공모전, 사업별 의견수렴 확대 등 추진
- (추진방안) 국민제안 이벤트, 대국민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해커톤 등을 통한 국민의견 반영 채널 다양화 추진
 - 특정사업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의견 수렴 강화
 - * '18년 추진사업인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 18년 시민참여채널 운영 및 의견수렴 추진 사업 >

사업명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수원통합청사 공개공지 등 설계	창원시 복합공영주차타워 개발
시민참여창구	장애인 가족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주민대표 참여 의견수렴창구	온라인, 설문조사, 직접방문 등

⑭ 시설·콘텐츠의 민간 개방 확대

- 부산 본사 강당 등 **지역주민 필요시설 개방** 시민의견 반영
 - (개요) 지역사회를 위해 본사 및 지역본부 시설 개방 확대
 - (추진방안) 도서관(17.7월 개방) 등 기존 개방시설의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 편익을 고려한 내부 공용시설 개방 추진
 - 도서관 내 교양도서, 어린이 도서 비치 확대 등으로 지역주민 이용활성화 도모
 - 주변 상가 활성화 등을 위해 야간을 포함한 주말·공휴일 시간대에 본·지사 소재 건물 내 주차 공간을 개방
 - 지역사회 행사·회의 등을 위한 본사 대강당(부산 남구 소재)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 대강당 등 시설에 캠프 열린강좌, 공매투자 아카데미, 대학생 취업 특강 등 지역주민에 개방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식공유 병행

- 연수원 「**캠코 인재개발원**」 개방 추진
 - (개요) 연수원(충남 아산시 소재) 대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에 연수원 시설 공유·개방 확대
 - (추진방안) 아산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 대상 대강당, 운동장(발표회, 운동회 등 행사용)의 주말 상시 개방 추진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소재 공공기관의 공익 행사 개최 시 대강당 등 무료 개방 추진
 - 단순 개방 외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 도모